

농식품부, 2010년 주요 현안 과제

2010년 농림수산물부 축산분야 2010년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축산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품목 대표조직 육성, 2011년 하반기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 BSE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 축산물 등급제도 개선,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등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그 가운데 한·EU FTA 대책, 낙농산업에 대한 주요 현안 과제를 발췌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한·EU FTA 대책

◇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 마련, 농가의 불안감 해소

- 현장성, 시의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
- 관세감축 전에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기에 집중 투자

가. 현황 및 문제점

- (협상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등 축산 품목은 관세준속기간 장기화
 - 냉동심검살(10년 철폐), 냉장심검 · 육살(10년+ ASG), 기타품목(5년)
 - 탈·전지·연유(현행관세유지 + TRQ 1,000톤), 치즈 (15년 철폐 + TRQ 4,500톤)
- (영향분석) 국내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 15년차에 2,481(한·미 FTA 이행 전제)/3,172억원(비전제) 수준으로 추정
 - 농수산물 생산감소액 중 약 90%가 양돈·낙농 등 축산분야
 - 양돈 1,055억원/1,214, 낙농 594/806, 양계 201/331, 쇠고기 370/526
-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대책 수립을 위해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EU FTA 대책 T/F 구성·운영 중(7.14~)
 -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품목별 경쟁력제고 기본방향 도출(7.20, 8.11) 및 세부대책 추진
 - 세부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대책반 실무회의 12회 개최(7.14~11.27)

- 낙농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회의 4회, 전문가 자문회의 1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4회,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이사회 4회, 지역별 농가토론회 10회

- 한·EU FTA 대비 조기대응이 필요한 사업예산 958억원을 '10년 예산(안)에 반영
 -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296억원), 전문원종농장(60) 및 모돈전문농장(20) 지원, 소모성질환백신(90) 지원 등

나. 추진계획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양돈) 질병근절 등을 통한 저지방부위 수출 확대, 우수 새끼돼지 공급체계 구축, 품질향상을 위한 돼지고기 등급제 개선 등
- (낙농) 전국 쿼터제 도입,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대상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양계) 난계대 전염병·뉴캐슬병 근절 및 대형닭(2.5kg 이상) 생산 확대로 생산성 향상,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시설 개선 등
- (한·육우) 농가조직화를 위한 기초·광역한우사업단 육성, 육우고기 수요창출을 위한 전문판매장 설치 및 홍보강화
-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원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확정하

고, 정식 서명(10. 상반기 전망)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발표 전까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EU FTA 대책 TF 논의 및 농어민 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2. 낙농산업 종합대책

◇ 안정적 우유수급체계 구축으로 필수식량 자원으로 입지 강화

-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전국권역차와 차차 목표생산량(200만톤) 도입
- 개량종격 최소화를 위해 수유장출, 품질개선, 생산상황상 도모

가. 현황 및 문제점

- 낙농제도 개편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유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어 근원적 제도개편의 적기 도래

○ '02년 이후 생산량, 잉여원유 및 원유수급조절자금 매년 감소

- 생산량/잉여량 : ('02) 2,537/505천톤 → ('05)2,229/323 → ('07) 2,188/313 → ('08) 2,139/283 → ('09.11) 1,934/191

- 낙농가 중심으로 FTA 등에 따른 낙농산업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 증대

○ 한·EU FTA 발효시 15년차 594~805억원 생산 감소 예상

- 그러나 생산(낙농가), 집유(협동조합 등), 가공(유업체), 소비 등 이해관계자가 서로 달라 모두를 만족하는 대책 마련 어려움

○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개방에 따른 가공유제품 수입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집행할 필요

- FTA 체제하에서도 적정 우유생산기반(200만톤 이상) 유지 필요

- 생산기반 유지 위해 소비확대, 계절진폭에 의한 잉여원유(20만톤) 처리 대책 모색

나. 추진계획

-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마무리 협의 추진(2월)

○ 생산자 위원회에 의한 쿼터관리,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 일원화 강제, FAT 피해보전 및 폐업보상 적불 요구 등이 쟁점

○ 낙육협회, 협동조합, 유업체, 서울우유 등과 산무협의(1~2월), 공청회(2월 하순) 개최 등으로 최종 정리

- 교섭력 증진 등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자위원회 설치, FTA로 인한 급격한 피해 발생시 구조조정 지원 검토

- 낙농발전종합대책 확정 발표(10년 3월)

○ 중앙낙농기구를 설립, 집유주체별 쿼터를 총괄 관리하여 수급을 안정시키는 전국적인 계획생산체계 구축

- 낙농산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Quota-Bank 운영

- 연간 쿼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Quota-Bank를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후계낙농인 및 영세 낙농가에게 임대

○ FTA에 의한 피해완화를 위해 계절진폭에 의한 잉여원유를 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여 국내 유제품 산업 육성

○ 학교우유급식, 신제품 개발, 체험복합 및 목장형 유기농사업, 낙농자조금사업 등을 통해 소비확대

○ 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구축 및 낙농단지 조성, 젖소개량,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 생산성 향상

- 낙농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10년 하반기)